

노동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

- 일 시 : 2019. 7. 8(월) 14:0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노동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

1 목적

-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노동현장에 만연한 안전경시 등 범위반 사례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9. 7. 8. (월) 14:00 ~ 16:30
-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최 : 충남연구원

3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 윤 황 원장(충남연구원)	전체사회 : 이흥택 박사
14:10~15:00	50	[발제 및 종합토론] 좌 장 :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발제 1 : 이윤근 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노동자 안전보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발제 2 : 노상철 교수(단국대병원) ▶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15:00~15:10	10	[휴식]	
15:10~16:30	100	[종합토론] 토론 1 : 이선영 의원(충남도의회) 토론 2 : 이정호 부장(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토론 3 : 안성환 사무국장(충남노사민정협의회) 토론 4 : 성민혜 노무사(노무법인 하임) 토론 5 : 양기근 교수(원광대학교) 토론 6 : 고승희 실장(충남연구원)	
16:30 ~		[폐회]	



목 차



I. 노동자 안전보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4

이윤근 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II.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역의 역할

..... 26

노상철 교수(단국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노동자 안전보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윤근 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자 안전보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산업재해는 왜 줄어들이지 않는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 윤 근**

살펴볼 것들

01. 산업재해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 통계로 보는 안전보건의 문제

02.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01. 산업재해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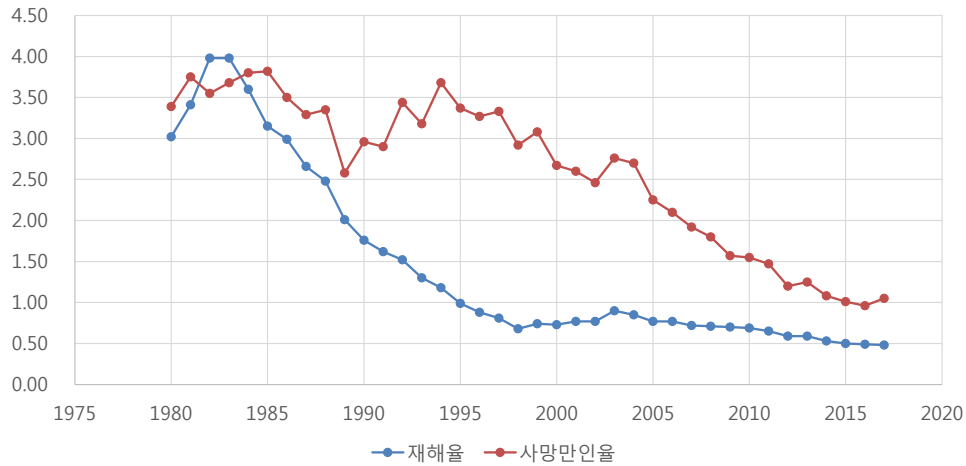
3

재해자 수 변화

연도	재해자수	사고성재해		업무상질병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	113,375	112,271	99.0	1,104	1.0
1981	117,816	115,658	98.2	2,158	1.8
1982	137,816	134,913	97.9	2,903	2.1
1983	156,972	153,381	97.7	3,591	2.3
1984	157,800	155,226	98.4	2,574	1.6
1985	141,809	138,904	98.0	2,905	2.0
1986	142,088	140,451	98.8	1,637	1.2
1987	142,596	140,973	98.9	1,623	1.1
1988	142,329	140,179	98.5	2,150	1.5
1989	134,127	132,566	98.8	1,561	1.2
1990	132,893	131,255	98.8	1,638	1.2
1991	128,169	126,632	98.8	1,537	1.2
1992	107,435	106,107	98.8	1,328	1.2
1993	90,288	88,875	98.4	1,413	1.6
1994	85,948	85,030	98.9	918	1.1
1995	78,034	76,914	98.6	1,120	1.4
1996	71,548	70,019	97.9	1,529	2.1
1997	66,770	65,346	97.9	1,424	2.1
1998	51,514	50,286	97.6	1,228	2.4
1999	55,405	52,673	95.1	2,732	4.9
2000	68,976	64,925	94.1	4,051	5.9
2001	81,434	75,858	93.2	5,576	6.8
2002	81,911	76,494	93.4	5,417	6.6
2003	94,924	85,794	90.4	9,130	9.6
2004	88,874	79,691	89.7	9,183	10.3
2005	85,411	77,916	91.2	7,495	8.8
2006	89,910	79,675	88.6	10,235	11.4
2007	90,147	78,675	87.3	11,472	12.7
2008	95,806	86,072	89.8	9,734	10.2
2009	97,821	89,100	91.1	8,721	8.9
2010	98,645	90,842	92.1	7,803	7.9
2011	93,292	86,045	92.2	7,247	7.8
2012	92,256	84,784	91.9	7,472	8.1
2013	91,824	84,197	91.7	7,627	8.3
2014	90,909	83,231	91.6	7,678	8.4
2015	90,129	82,210	91.2	7,919	8.8
2016	90,656	82,780	91.3	7,876	8.7
2017	89,848	80,665	89.8	9,183	10.2

[출처 : 각 연도별 산업재해분석(노동부) 자료를 재 분석하였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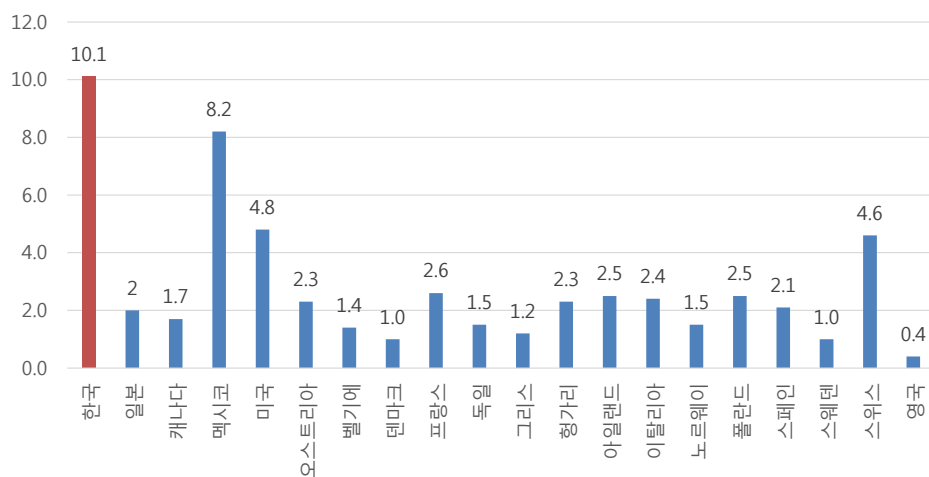
재해율 추이



[출처 : 각 연도별 산업재해분석(노동부) 자료를 재 분석하였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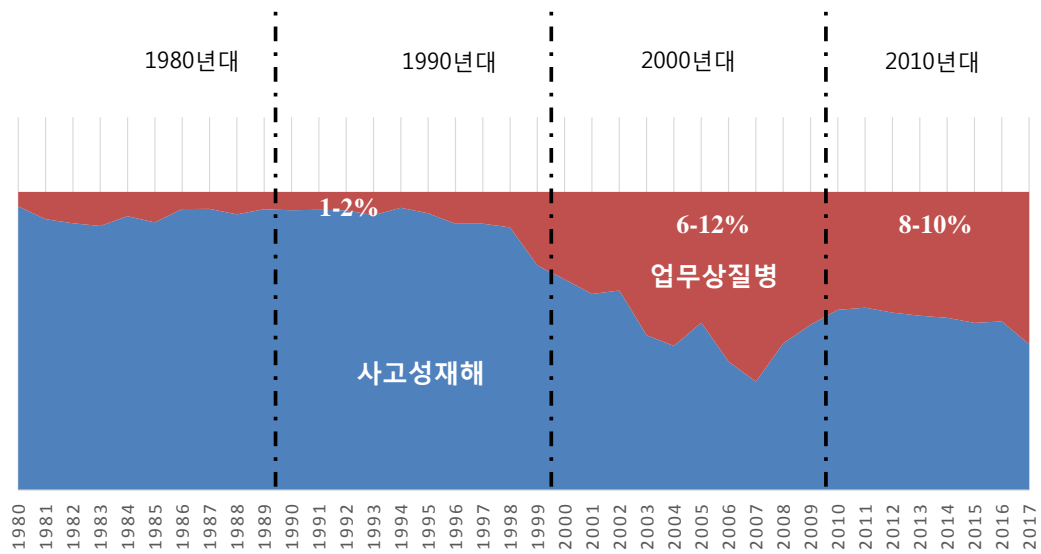
주요 OECD 국가의 중대재해율 비교 (2015년 기준, 10만명당발생률)



[출처 :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통계청(2018)]

6

업무상질병자 비율 추이



[출처 : 각 연도별 산업재해분석(노동부) 자료를 재 분석하였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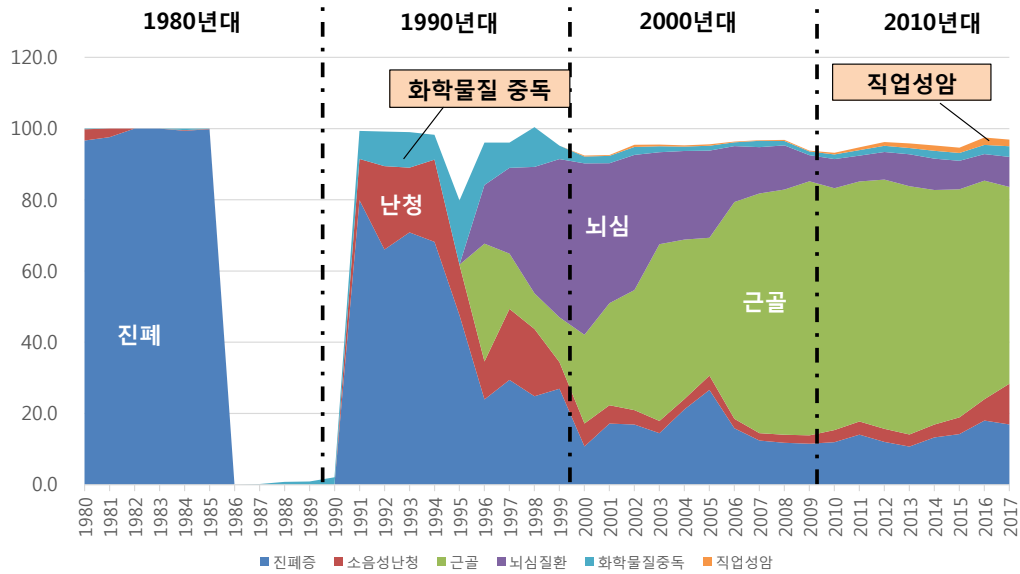
주요 업무상질병의 시기적 변화

연도	업무상 질병	진폐+ 난청	화학물질 중독	직업 성암	작업관련 성질환	연도	업무상 질병	진폐+ 난청	화학물질 중독	직업성 암	작업관련 성질환
1980	1,104	1,102	2			2000	4,051	696	78	11	3,097
1981	2,158	2,158	-			2001	5,576	1,244	115	13	4,038
1982	2,903	2,903	-			2002	5,417	1,134	121	33	4,066
1983	3,591	3,591	-			2003	9,130	1,634	153	43	7,225
1984	2,574	2,563	11			2004	9,183	2,209	113	32	6,691
1985	2,905	2,903	2			2005	7,495	2,296	103	30	4,971
1986	1,637	-	0			2006	10,235	1,892	109	21	8,061
1987	1,623	-	3			2007	11,472	1,659	204	20	9,374
1988	2,150	-	17			2008	9,734	1,365	120	30	8,081
1989	1,561	-	14			2009	8,721	1,208	91	20	6,975
1990	1,638	-	34			2010	7,803	1,197	102	36	6,227
1991	1,537	1,406	121			2011	7,247	1,286	112	57	5,655
1992	1,328	1,188	129			2012	7,472	1,172	130	79	5,972
1993	1,413	1,258	141			2013	7,627	1,075	134	99	6,213
1994	918	838	64			2014	7,678	1,297	169	115	5,946
1995	1,120	692	202			2015	7,919	1,497	174	118	5,960
1996	1,529	529	182		818	2016	7,876	1,890	203	164	5,642
1997	1,424	703	101		620	2017	9,183	2,604	275	171	6,008
1998	1,228	537	137		614						
1999	2,732	940	103		1,558						

- 기타 업무상질병자는 별도 제시하지 않음, 출처 : 각 연도별 산업재해분석(노동부) 자료를 재 분석하였음
- 직업성암환자 2000-2009년까지는 기존 연구 결과(이원철 등, 2011)를, 2010년-2017년은 산업재해통계 중 진폐와 직업성 암환자를 합한 것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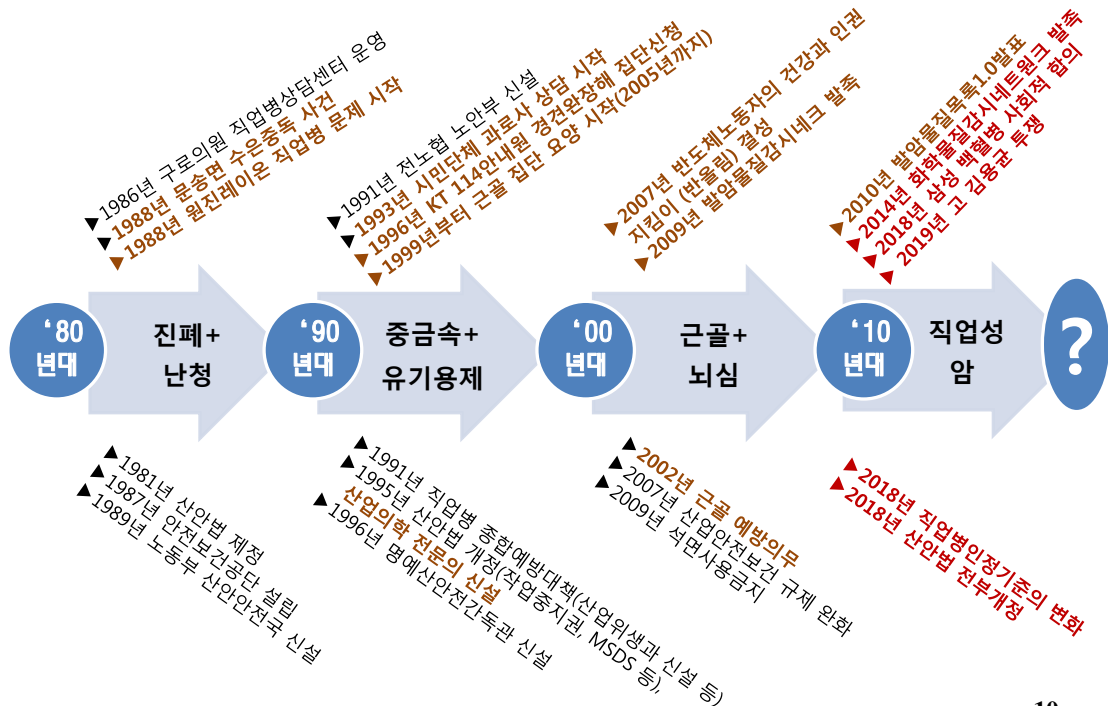
업무상질병 종류별 비중 추이



[출처 : 각 연도별 산업재해분석(노동부) 자료를 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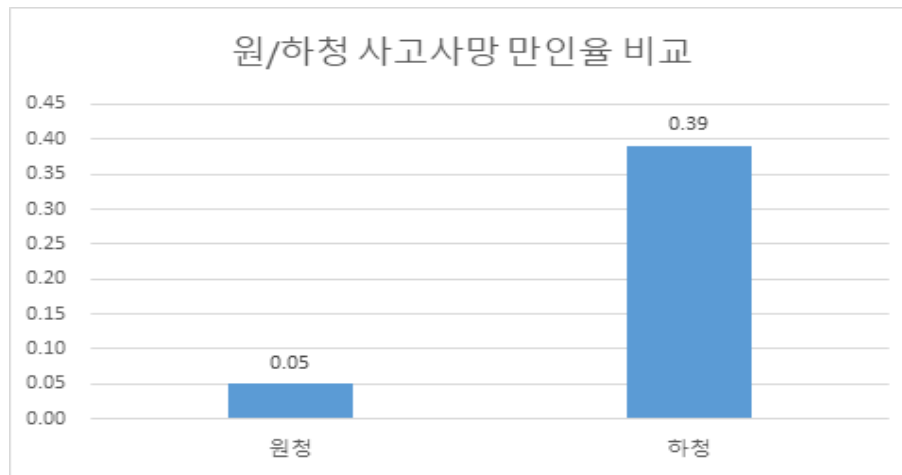
9

사회적 이슈와 직업병의 변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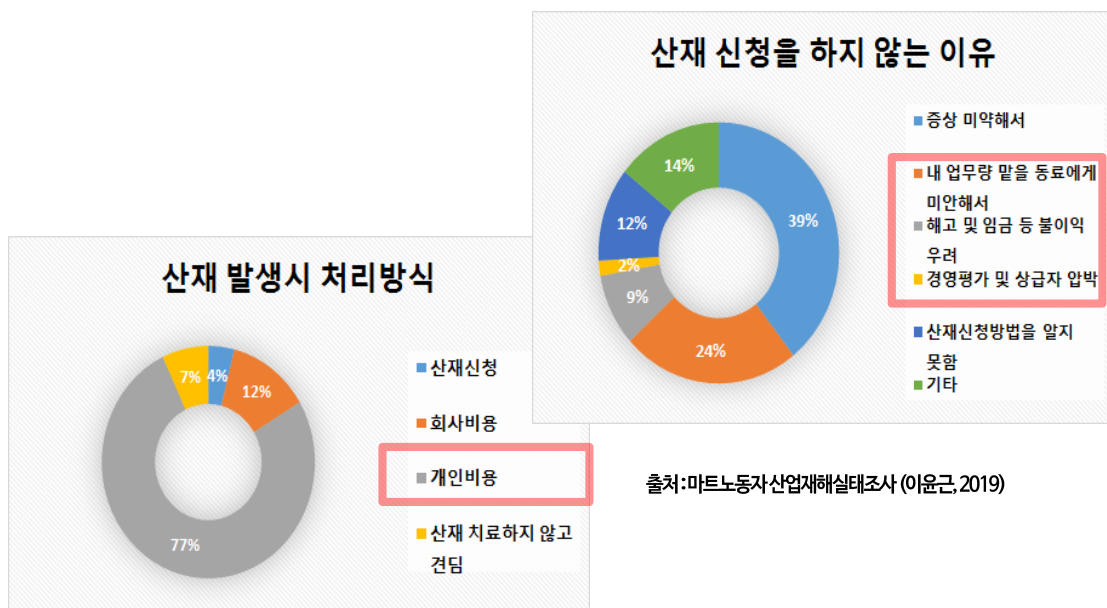
원/하청간 사망사고 비교



출처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안전보건공단, 2016)

11

상당부분의 산업재해는 은폐되고 있다.



12

부정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산업재해

- 위험하고 힘든 일은 왜! 하청노동자가 해야 하는가?
- 왜 산업재해가 은폐되는가?

죽음도 '불평등'... "하청이 먼저 죽는다"

13

정리하면 ...

- 전체적인 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 선진국 수준?
- 그러나 중대재해율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재해율
- 직업병 통계는 일정한 추이가 없음 → 사회적 이슈가 반영됨
- 전체 재해율은 선진국 수준이나 중대재해율은 세계 1~2위 수준
- 추측컨데...
 - 사소한 재해는 상당 부분 은폐되고 있다?
 - 상당 부분의 직업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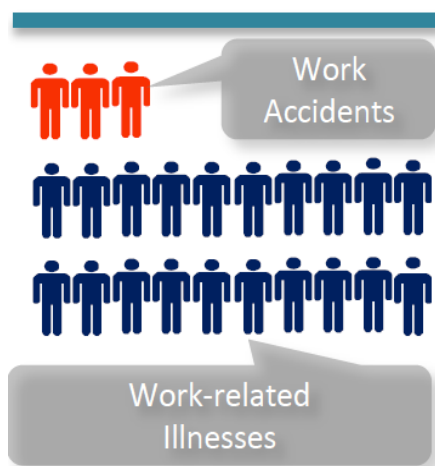
14

정상적인 통계로 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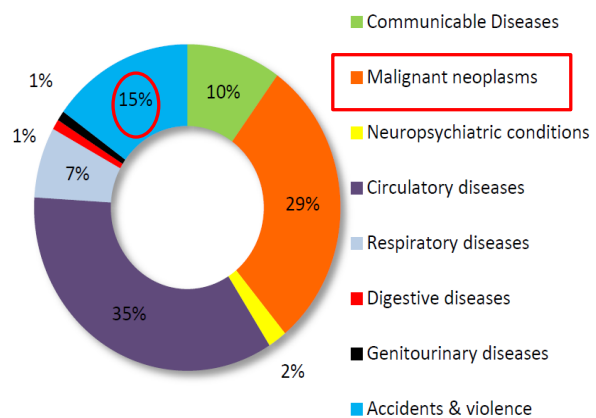
15

아주 많이 질병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다.

2.3 million deaths



% Work-related Mor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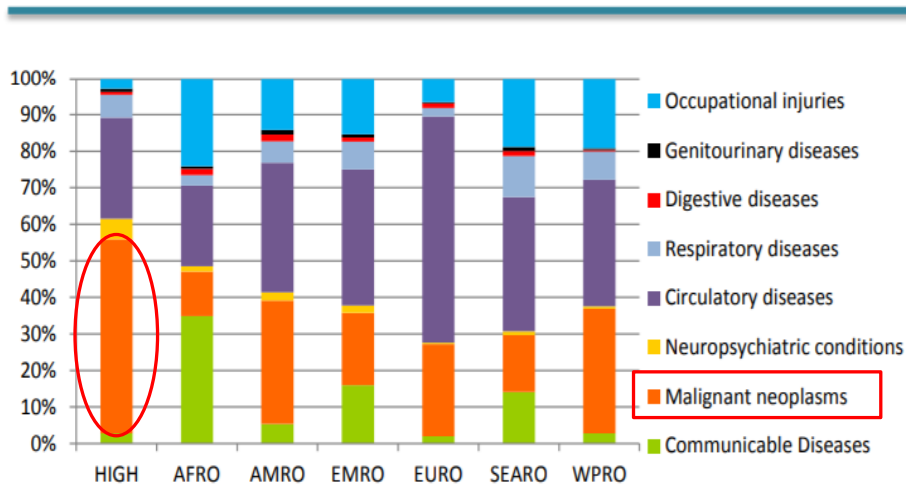


Ref. Nenonen N., Härmäläinen P., Takala J., Saarela K.L., Lim S.L., Lim G.K., Manickam K. and Yong E.
(2014)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fatal work-related diseases in 2014

16

특히, 직업성암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다.

Distribution of Work-related illness by WHO regions



Ref.: Nenonen N., Hämäläinen P., Takala J., Saarela K.L., Lim S.L., Lim G.K., Manickam K. and Yong E. (2014)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fatal work-related diseases in 2014

17

[유럽 국가의 재해 사망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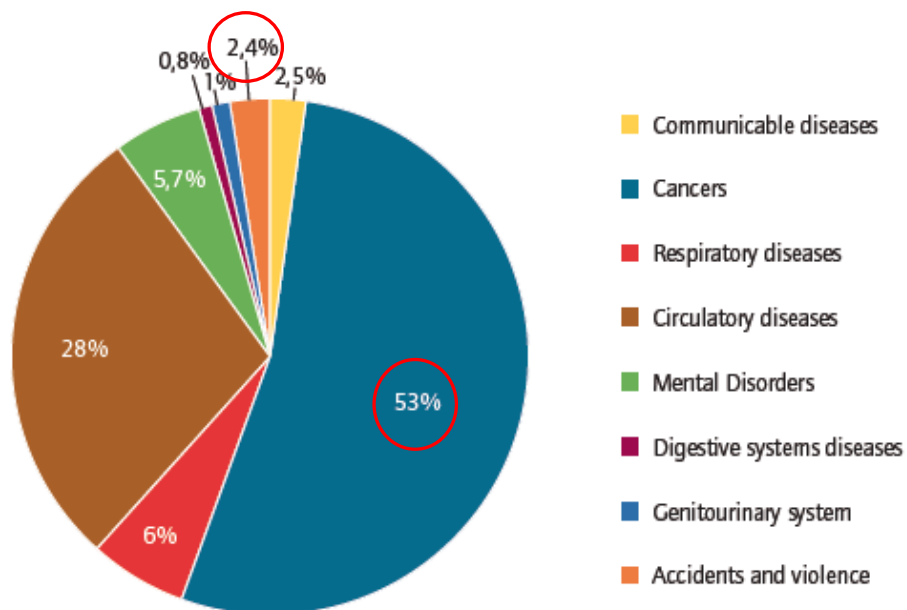


Figure 3: Work-related annual deaths in the EU28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source : Jukka Takala, 2014)

18

[유럽 국가의 재해 사망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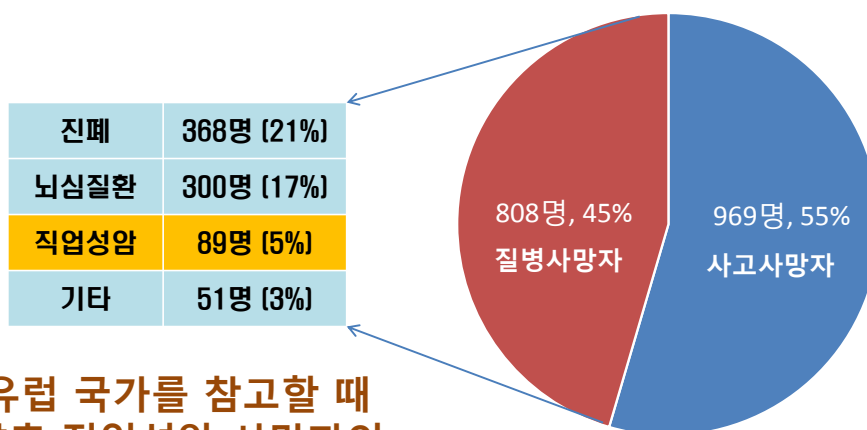


19

[국내 재해 사망자 비교]

사고사망자와 업무상질병 사망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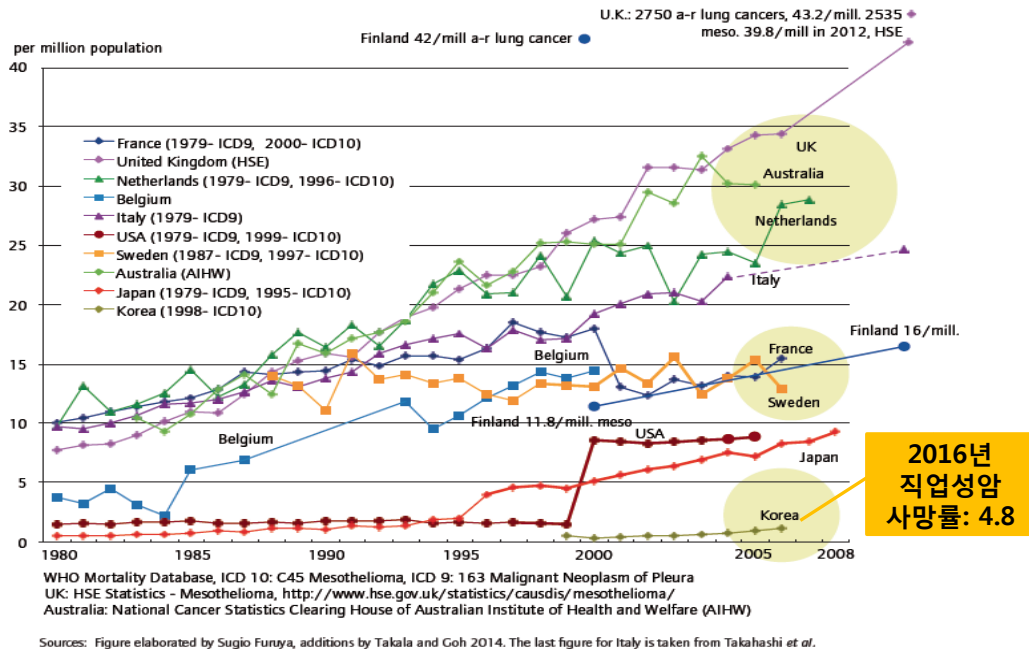
(출처: 2016년 산업재해 분석자료 재 분석)



유럽 국가를 참고할 때
향후 직업성암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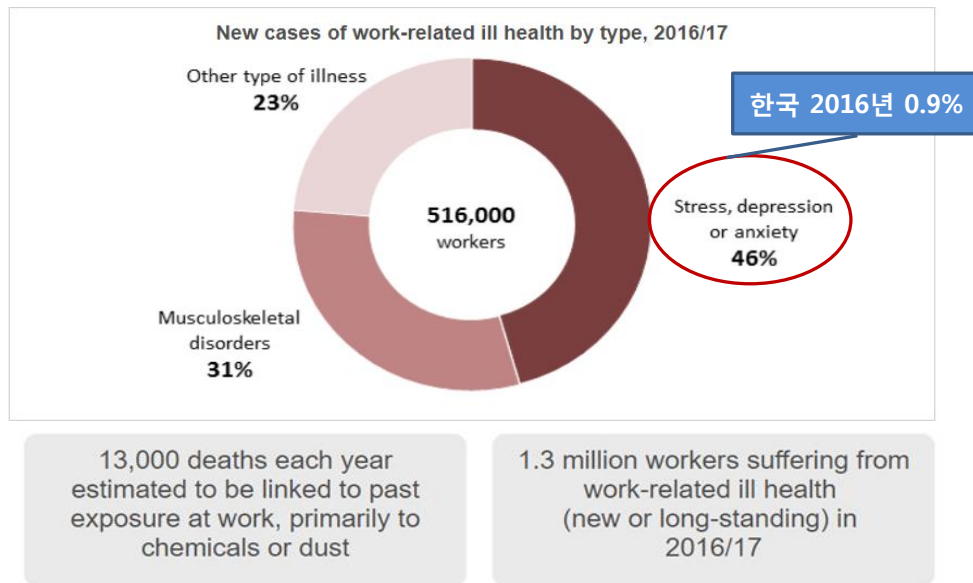
20

[현재보다 3~8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21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출처: HSE, 2018

22

예측되는 문제들

- **직업성암 증가**
- **미지의 유해성(나노입자, 신규 화학물질 등)**
- **노출 환경의 다변화 (생활환경, 환경호르몬 등)**
- **정신건강**
- **소외계층의 건강문제(여성,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 **그림자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교육,훈련생, 무급 가족노동자 등)**
- **양질의 노동 (노동, 삶, 건강), WLB → WLHB**

23

02.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4

1. 현장에서 작동되는 알권리

- 알지 못하면 위험을 수용할 수 없음,
- 알권리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
- 그러나 현재의 알권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혹은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개선방향**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작업자) 관점에서
 - 접근 가능해야 하며,
 -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 얻어진 정보를 통해 활용 가능해야 함(회피, 신고, 요구)

25

영업비밀이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한 영업상 비밀의 충족 조건
 -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유지성**),
 - (4)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유용성**)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SK하이닉스는 정보공개?

26

판단 기준은 ?

비밀은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하는가?

27

2. 회피할 수 있는 권리 : 회피권

- 위험성이 감지(예측)될 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피난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알아도 피할 수 없다면 알권리는 의미가 없음
→ 회피권은 알권리의 실행적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
- **개선방향**
 - 알았을 때 회피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보장되어야 함
→ 선 조치 / 후 보고
→ 불이익(보복) 금지 : 인사상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등

28

작업중지권은 왜! 작동되지 않는가?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시 바로 옆에 있는 공장 노동자는 왜 대피할 수 없었나?
-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 시 위험을 감지하고도 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29

3.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 노동자가 정책 및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제가 예측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참여권은 절차적 정의의 필수조건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장됨

30

참여권 사례 : 스웨덴

-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
 -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 50인 미만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때
 - 활동시간과 교육, 권한 등 보장
- **안전위원(Safety Delegate)**
 - 5명 이상의 모든 작업장, 기타 필요한 작업장, 3년 임기 보장
 - 교대 작업장은 교대조별로 구성, 라인별 특성 반영
 - 교육 훈련에 대한 권리
 - 시간외 임금 보상 권리
 -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 고통과 차별로부터의 보호되는 권리
 - 위험한 작업을 멈추는 권리
- **지역 안전위원(regional safety delegates)**

31

4.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지

- **미국 OSHA의 고지 의무(포스터 게시) 처럼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지토록 함 : OSHA - 29 CFR 1903.2(a)(1) - Posting of notices**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처럼 작업자에게 고지의무 부여**
- **게시판 및 작업 현장 부착 의무**
-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무교육**

32



Job Safety and Health IT'S THE LAW!

All workers have the right to:

- A safe workplace.
- Raise a safety or health concern with your employer or OSHA, or report a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without being retaliated against.
- Receive information and training on job hazards, including all hazardous substances in your workplace.
- Request an OSHA inspection of your workplace if you believe there are unsafe or unhealthy conditions. OSHA will keep your name confidential.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representative contact OSHA on your behalf.
- Participate (or have your representative participate) in an OSHA inspection and speak in private to the inspector.
- File a complaint with OSHA within 30 days (by phone, online or by mail) if you have been retaliated against for using your rights.
- See any OSHA citations issued to your employer.
- Request copies of your medical records, tests that measure hazards in the workplace, and the workplace injury and illness log.

This poster is available free from OSHA.

Contact OSHA. We can help.

Employers must:

- Provide employees a workplace free from recognized hazards. It is illegal to retaliate against an employee for using any of their rights under the law, including raising a health and safety concern with you or with OSHA, or reporting a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 Comply with all applicable OSHA standards.
- Report to OSHA all work-related fatalities within 8 hours, and all inpatient hospitalizations, amputations and losses of an eye within 24 hours.
- Provide required training to all workers in a language and vocabulary they can understand.
- Prominently display this poster in the workplace.
- Post OSHA citations at or near the place of the alleged violations.

FREE ASSISTANCE to identify and correct hazards is available to small and medium-sized employers, without citation or penalty, through OSHA-supported consultation programs in every state.



1-800-321-OSHA (6742) • TTY 1-877-889-5627 • www.osha.gov

33

노동자 권리

-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
- 위험상황을 신고할 수 있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불이익(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대리인 포함)

사업주 의무

-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 관련 법규 준수 의무
- 상황발생시 신고와 보고의무
- 정보제공과 교육의 의무



34

5. 사회적 변화

- 노동자에 대한 편견, 공감격차
- 산재 문제를 **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
- 차별
- 소통
- ...

✓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객관적 상황은?

35

공감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공감격차 (Empathy Gap)란?

“과학자/사업주/정책결정권자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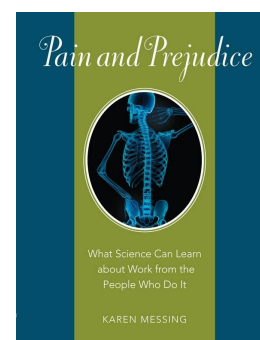
“백화점 노동자는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의사나 변호사는 앉아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 인식의 차이, 사회적 문제

→ 노동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



Karen Messing | Ph.D



36

산재보상 – 과학적 근거의 함정

**“백혈병과 무관…
근거는?
말 못해!”**



- ✓ 과학적 근거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과학적 근거에 못 미치면 진실이 아닌가?
- ✓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의 차이는 무엇인가?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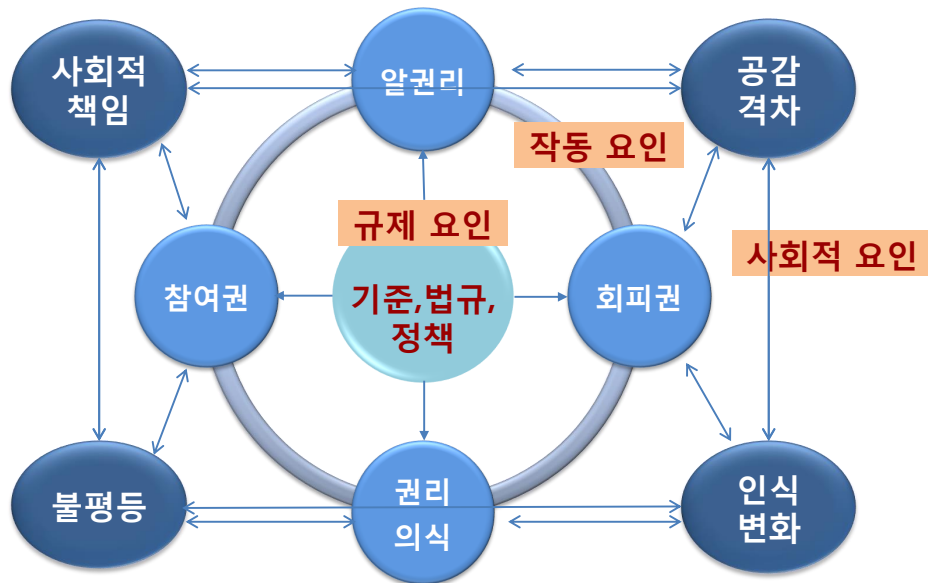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성 강화

- 기업은 노동자와 소비자(지역주민)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
-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에만 관심**
- 노동자와 소비자 보호는 소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잣대
대가 될 수 있음**

38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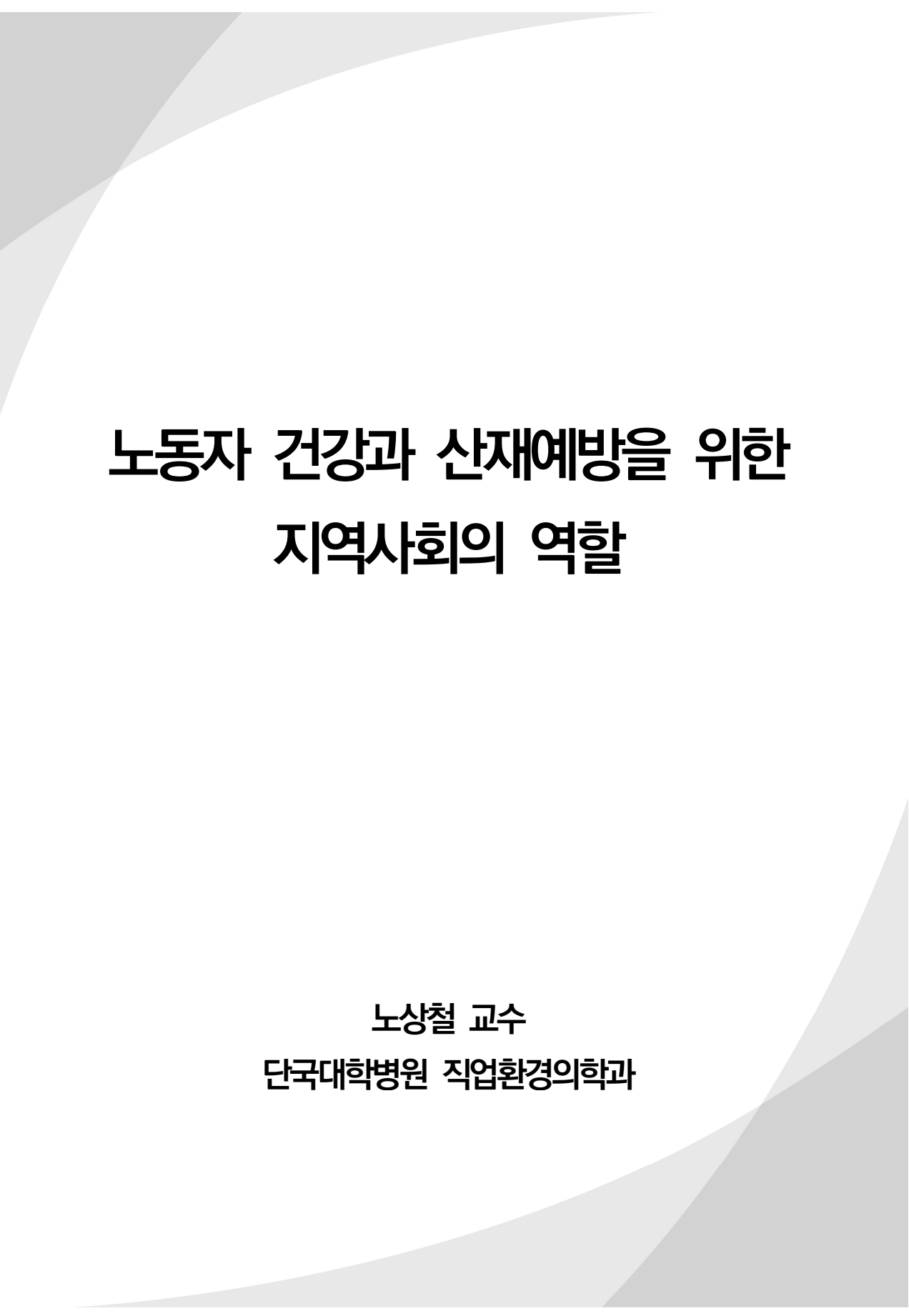
39

마지막 고민?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까?
- 있다면 어떤 일부터 할 수 있을까?

40

감사합니다.



노동자 건강과 산재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노상철 교수
단국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노동자 건강과 산재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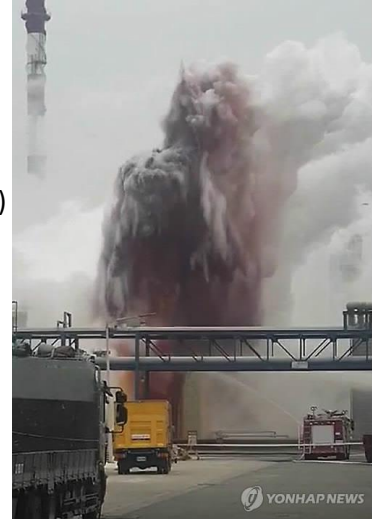
단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단국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노상철

순서

- 최근 현황
- 직업병과 환경병
- 산재통계 자료(충남 / 전국)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노동정책 방향 및 내용
- 우리나라 산재예방 정책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요약 및 고려사항

우리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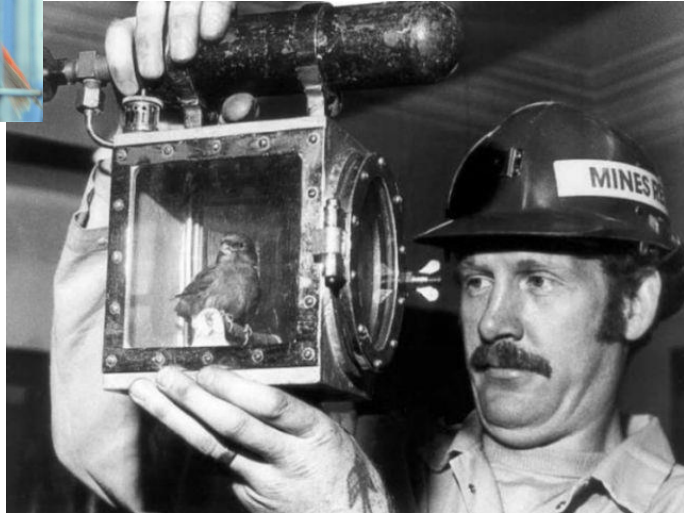
- 충남의 사업장은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가?
- 유사한 사고들 연속 : 무감각, 무시, 무관심인가?
- 충남의 노동현장은 무법천지인가?
- 사례 :
 - 현대제철 - 지난 12년동안 36명 노동자 사망
 -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18.12.11)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19.4.26 ; 5.16,17)
 - 현장 노동자 및 인근주민 703명 환자 발생(21일 기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 **현대제철**
 - 안 : 지난 12년 동안 36명 노동자 사망
 - 밖 : '18년 전국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 : '17-'18년 말까지 시안화수소(청산가스) 배출(감사원 보고서)
 - 충남도 '변경신고 미이행' 이유로 60만원 과태료 부과
- **태안화력발전소**
 - 안 : 지난 10년 동안 58건 사고 / 12명 노동자 사망
 - 밖 : 불소화합물 초과 배출(감사원 보고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량 전국 각각1, 2위
- **대산 석유화학단지(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 안 : '17년 3건 / '18년 10건 / '19년 6건 안전사고 발생
 - 밖 : 한화토탈 - 유증기 유출사고 발생(인근 주민 다수 피해)
 - : 현대오일뱅크 - 가열시설에서 크롬 배출('18년10월)
 - : 롯데케미칼 - 벤젠 5~6톤 누출('18년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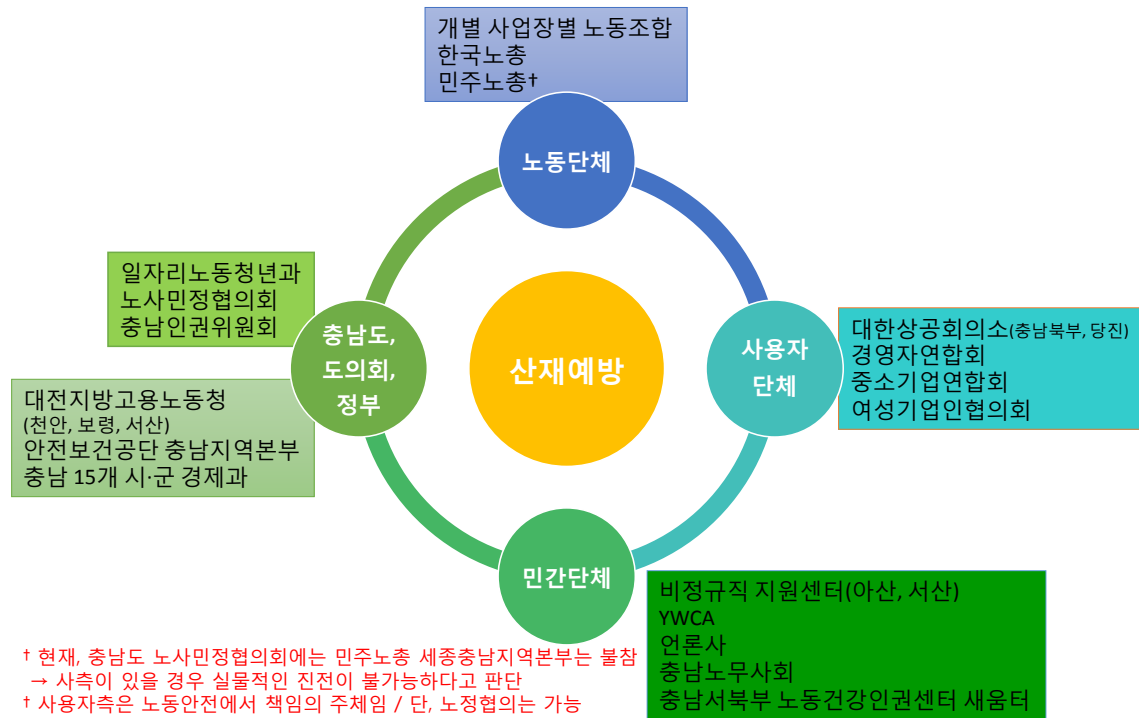
카나리아와 광부



직업병과 환경병

- 직업병은 제한된 공간 내 소수의 노동자들에서 발생
- 환경병은 개방된 공간에서의 다수의 일반인들에서 발생
-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환경병의 첨병(sentinel case) 역할
 - 일차적인 노출 감소와 건강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직업병 예방 실패 시 일반인들에게 영향 가능
- 한화토탈 사고의 교훈
 - 작업장 담벼락 내의 문제가 담 밖으로
 - 예방 소홀은 대규모의 문제로 확산 가능
 -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책 수립 한계
 - 충남도내 주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 관리 필요(화력발전소 및 제철단지)

산재예방 관련 각 주체



산재 발생 시 각 주체별 특성 비교

특성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민간단체	지자체,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목적	산재 규명	산재 규명	피해 최소	산재 예방	중재 역할
입장	공격적	공격적	방어적	공격적	삼자적
절박성	↑	↑↑	↓	↑	↓
전문성	↑	↑↑	↓	↑↑	→
대책 범위	종합적	종합적	최소한	제한적	원론적
대표성	↑	↑	→	↑	↑
신속성	↑	↑↑	→	↑↑	→
공정성	→	↑	↓	↑	↑
참여 의지	↑	↑↑†	↓	↑	→
재원 부담	↓	↓	↑	→	↑↑
소통 수준	↑	↓	→	→	↑
장기적 이득	→	→	↑↑	→	↑

† 사용자 단체와의 공동 협응은 반대함

산재 통계 자료(충남 / 전국)

- 출처 : 대전지방노동청

'18년 충청남도 산업재해 현황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계	사망	부상	요양	계	사망	부상	요양	계	사망	부상	요양
4,444	148	3,865	431	4,998	149	4,282	567	↑ 554 (↑ 12.47)	↑ 1 (↑ 0.67)	↑ 417 (↑ 10.79)	↑ 136 (↑ 31.55)

⇒ 우리 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1.70%**으로 전국평균 1.12%보다
0.58%p 높은 수준으로 **전국 2위임**. <전국 1위 :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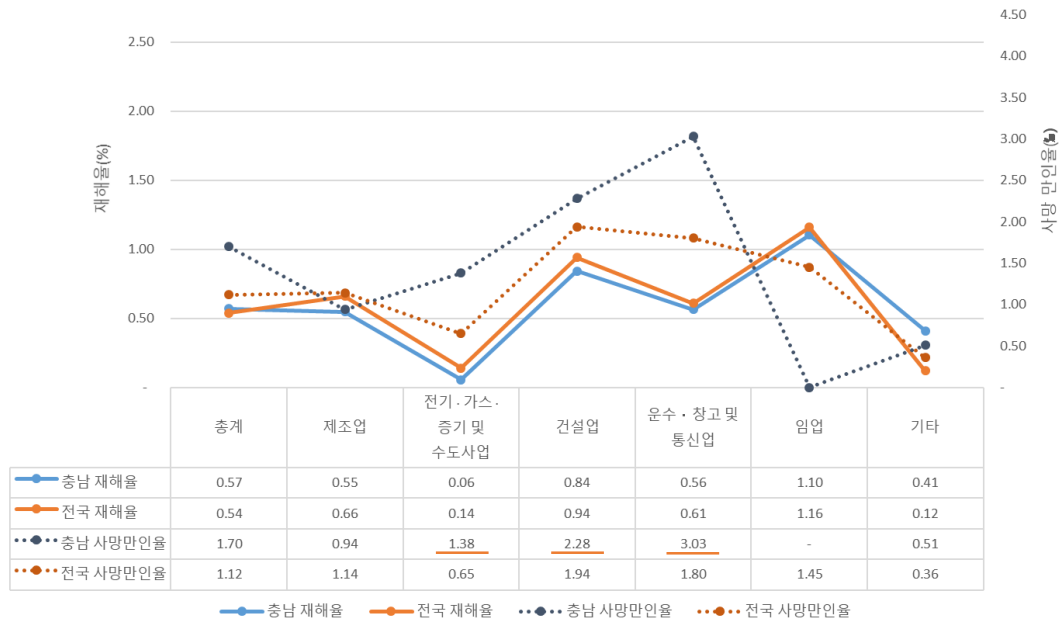
1) 업무상 사고

2017			2018			전년대비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3,925	60	3,865	4,344	62	4,282	↑ 419 (↑ 10.68)	↑ 2 (↑ 3.3)	↑ 417 (↑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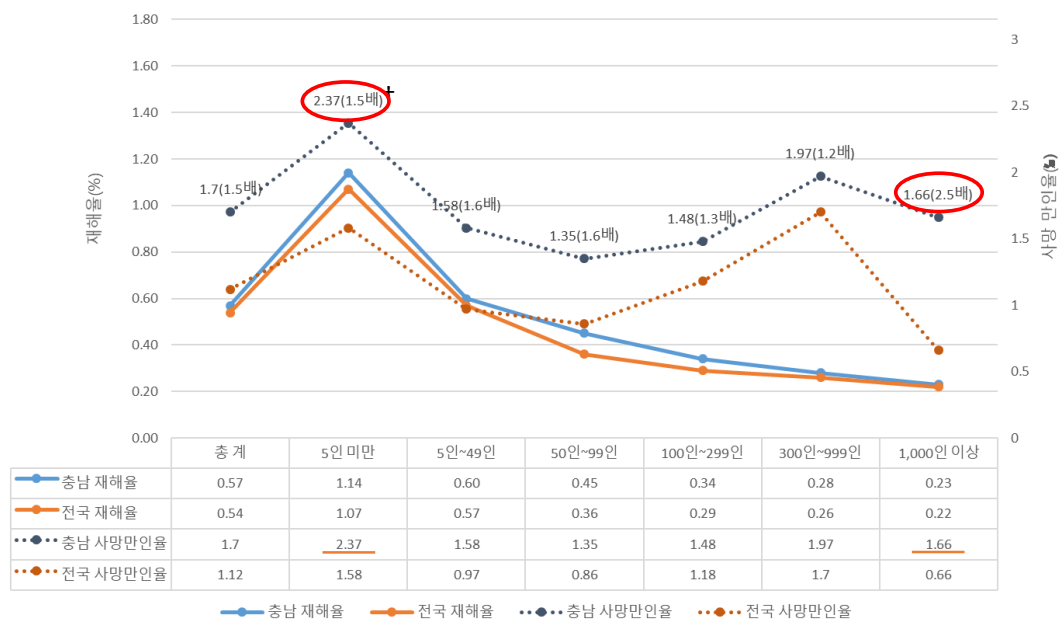
2) 업무상 질병

2017			2018			전년대비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519	88	431	654	87	567	↑ 135 (↑ 26.01)	↑ 1 (↑ 1.14)	↑ 136 (↑ 31.55)

업종별 충남과 전국 산업재해 비교('18년, 광업 제외)



규모별 충남과 전국 산업재해 비교('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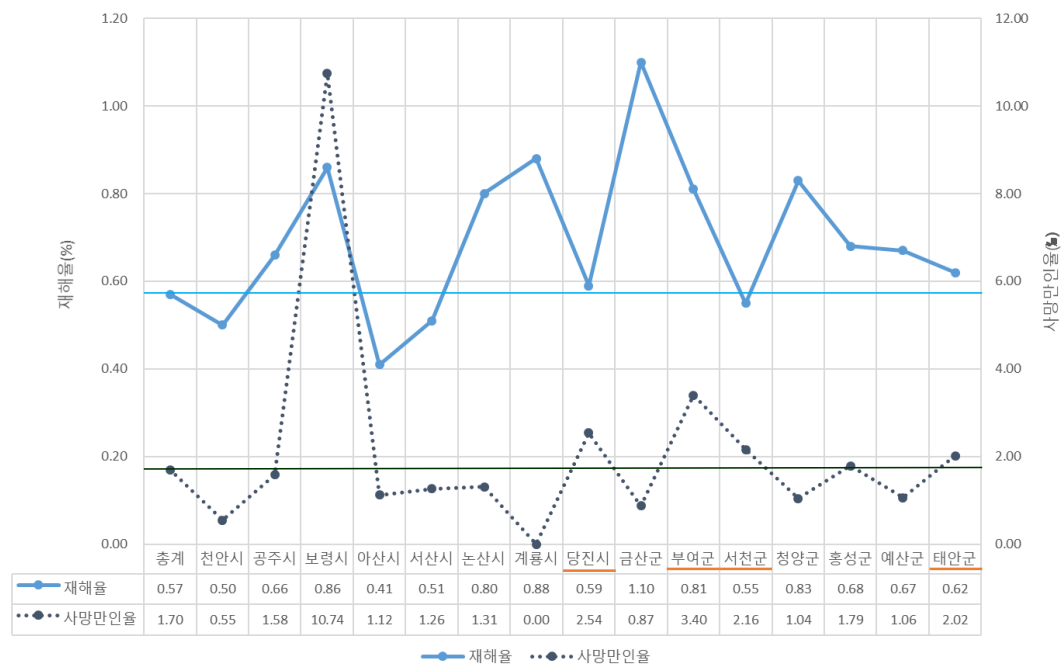


† () = ➔ 전국 대비 충남 사망만인율 배수(충남사망만인율/전국사망만인율)

연령별 충남과 전국 산업재해 비교('18년)



충청남도 시군별 산업재해



충남도 산업재해 통계 특성

- 충남 산재 재해율(0.57)은 전국 재해율(0.54)과 유사함
- 충남 사망만인율(1.70)은 전국(1.12) 대비 약 1.5 배 수준
- 업종별
 - 전기·가스 등,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높음
- 규모별
 - 5인 미만(재해율 : 2.37 ; 최고치), 1,000인 이상(2.5배)
- 연령별
 - 25~29세, 35~54세 연령에서 전국 대비 모두 높음
 - 40~44세 ; 전국 대비 약 1.5배
- 충남 시군별
 - 당진, 부여, 서천, 태안군에서 충남도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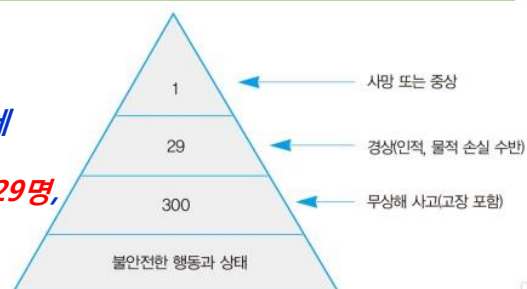
2008년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국제노동기구(ILO)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62.7	282.9	102.0	355.4	64.1	244.5
사망만인율	1.59	0.20	0.21	1.00	0.15	0.4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3년)과 비교
 -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약 4배 낮으며,
 - 사망만인율은 약 3배 높음

※ 하인리히 법칙(대형사고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 발생)
- 중대재해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이 **29명**,
- 위험한 행동이나 사건이 **300건** 발생



[†]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4-133호, 2014년)

실제 산업재해 규모 추정

■ 임준(2013)에 따르면, 주상병에 국한할 때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산재보험 미적용자수는 중간값 기준으로 2009년 1,425,962명, 2010년 1,490,097명, 2011년 1,452,027명으로 추정되었음.

■ 부상병까지 포함해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산재보험 미적용자수를 추정하면, 2009년 1,556,751명, 2010년 1,628,871명, 2011년 1,590,542명으로 분석되었음.

연도	건강보험 진료실인원	직업성 질환 기여율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 수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2009년	2,585,965	38.3%	60.2%	82.1%	990,425	1,556,751	2,123,077
2010년	2,705,766	38.3%	60.2%	82.1%	1,036,308	1,628,871	2,221,434
2011년	2,642,097	38.3%	60.2%	82.1%	1,011,923	1,590,542	2,169,162

출처 : 임준,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추정 및 해결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2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의 노동정책 방향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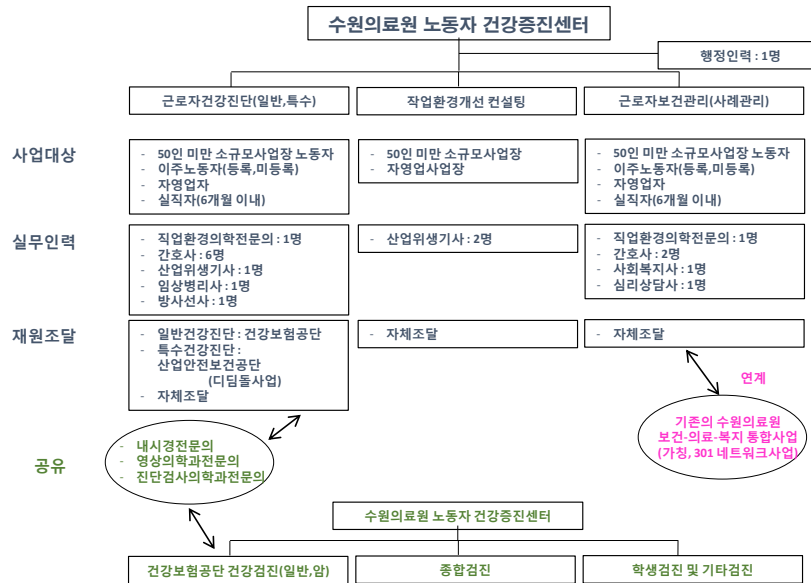
+ 출처 :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청
관련 신문 기사

경기도

경기도 추진 내용 및 방향

-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19.1.24)
 - 노동자 건강증진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제4조)
 -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관리지원단 설치·운영(제5, 6조)
 -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제10조)
-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사업 시행('19.6월)
 - 노동자 건강증진센터(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내) 설치 : 거점 역할
 - 사업장 방문 건강검진, 취약 노동자 등록 및 사례관리,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기존 지역 보건의료체계와 연계 등
 - 예산 : 1,058,000,000(10억5천8백만원)
 - 인력 : 총21명
 - 계획 : 2020년 북부센터 추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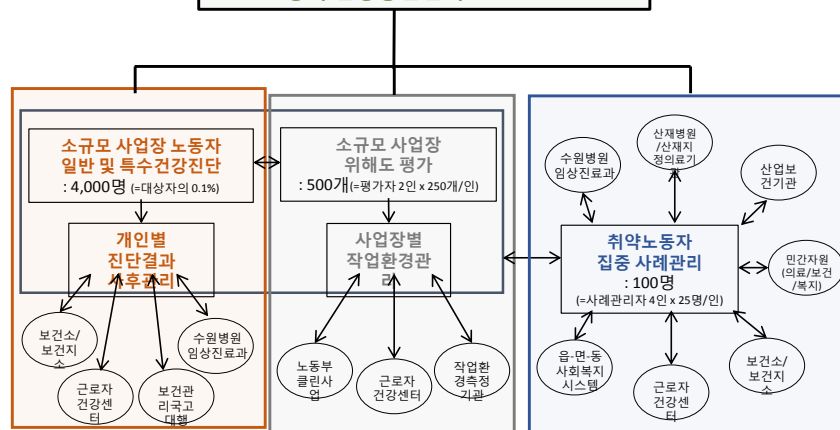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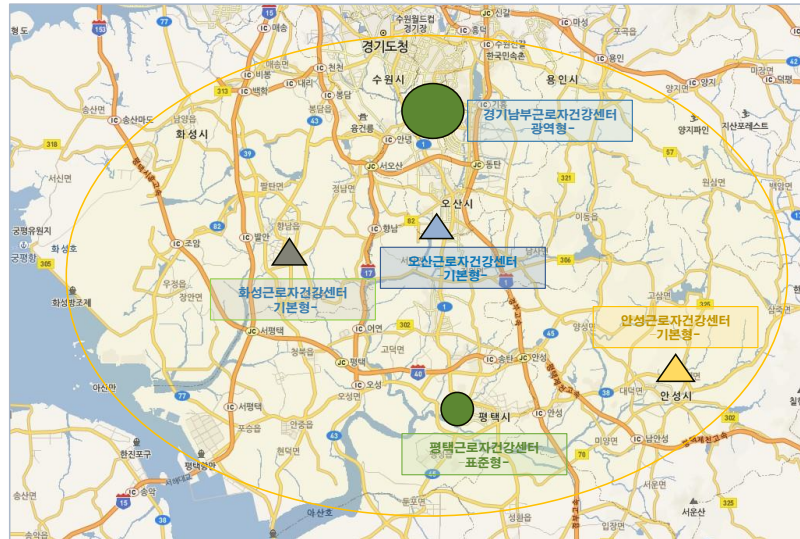
경기도 전체 현황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수 : 867,368개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수 : 3,393,266명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2017년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수원의료원 내)



(참고 : 그림 안에 제시된 수치는 1년 동안의 목표량임)



서울특별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 서울시 산업안전팀 신설('19년1월)
 - 노동민생정책국 산하 노동정책과 내 '노동안전' 전담조직
- '16년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산업노동안전 영역의 중요성 대두
 - 서울시 노동정책 개념 변경(기존, 근로조건, 고용안정)
 -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 채택('18년)
-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4대 계획)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19.4.30)
 -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수요 반영 :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 실현
 -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 설립 : 19년(12+5개소) ; 20년(22개소) ; 21년(25개소)
 - ‘작업중지권’보장,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50인 이상) 실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지정,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 및 마을노무사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확대 운영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4대 계획	실천 세부 사항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노동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산재 예방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19년 하반기) • 2022년까지 서울의 산재 사망사고만인율을 절반 감축 추진(0.1 -> 0.05) • 산업안전매뉴얼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현장점검 병행 •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확대로 안전중시문화 확산 • 산업재해 유형별 원인, 안전 취약영역 등 분석, 노동안전 실태조사 • 대표 위험직군 5대 분야(청소·경비·건설·정비·운전)에 대한 분야별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건설 등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 위험요인 분석 후 개선과제 도출
현장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직업건강, 산업안전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가이드라인 등 준수 점검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 책임제 운영으로 밀착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직업건강, 산업안전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가이드라인 등 준수 점검
노동안전대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가칭)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확보 지원 조례 등 제정

주요국의 산재예방정책[†]

- 우리나라
- 영국
- 프랑스

[†]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정책추진 및 대응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7

산재예방 차수별 계획과 기간

-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1991-1996년)
-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1997-1999년)
-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2000-2004년)
- 제2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2005-2009년)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2014년) 및
제3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PLUS(2010-2014년)
-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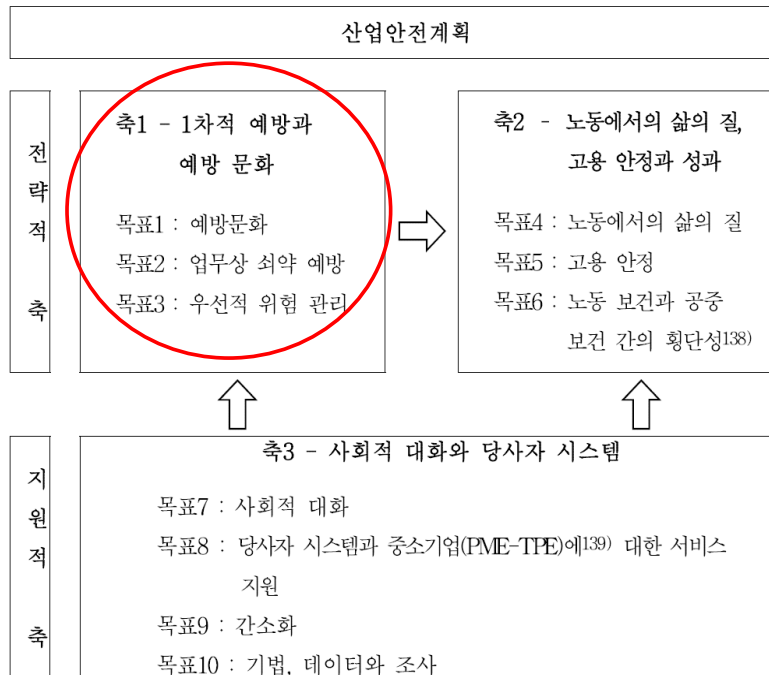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개선 전략

- 안전보건책임 명확화
 - 사업주의 책임 강화
 - 특성별 안전보건관리 체제 확충
- 안전보건 대응능력 제고
 - 맞춤형 안전보건지원 강화
 - 유해 작업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차등관리
-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 법체계 선진화와 법 적용범위 확대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합리화
-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 안전보건교육 제도 전면 개편
 - 산재은폐 근절 대책의 수립과 수행

영국, 안전보건청

- 안전보건청은 2012년 6월경 3개년 안전보건사업계획(HSE Business Plan 2012-2015)을 발표
- 기본적 방향은 이전 정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의 로드맵을 유지하되,
- 안전보건정책에서 관료주의를 감소시키고 **노동현장 중심의 실제적 위험감소에 집중**한다는 정책을 표방

프랑스, 3차 산재예방계획('16~'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1/3)

1) 보호범위 확대

- 산안법 보호범위 : 근로자 → 노무 제공자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 보호 확대

2) 도급 제한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 수은, 도금, 제련 등. 일시 간헐은 허용 (기술적 사유인 경우 노동부 인가 필요)
- 도급인가 확대 및 강화 : 인가 기한 설정 및 관리 강화
- 도급인가 사업장 재하도급 금지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 원청 책임 강화

- 원청 범위 확대 :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확대. 제조, 건설, 서비스 모두 적용
- 원청이 다단계 하청까지 책임 강화 : 관계 수급인 개념 도입
- 원청 사업장 범위 확대 (원청 사업장, 원청 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이면서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로 시행령 위임)
- 원청의 하청의 안전교육 확인의무부여, 원청이 위험정보 미 제공시 하청의 지체책임 면제
- 대표이사가 안전계획(비용, 시설, 인원 포함)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책임 부여.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2/3)

4) 작업 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노동자 작업대피권, 사용자 작업 중지 의무 구분 명확화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명령 법제화
- 작업 중지 해제 시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참여 명시)

5) 건설업 산재예방

- 발주처 책임 강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주처 책임 부여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이 직접 안전조치 책임부여 (범위 시행령 위임)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 도입
- 건설업을 별도 특례로 종합 규정

6)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 MSDS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보고대상 조정
-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 화학물질 독성 정보 (영업비밀 사항 포함) 공개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3/3)

7) 기업 처벌 강화

- 산재사망에 처벌강화 : 가중처벌 (5년 이내 범죄행위 반복인 경우 1.5배 형량 가중)
- 하청 산재사망 원청 처벌 : 산재사망 처벌조항에 원청 법 위반도 적용
- 기업 법인 처벌 강화 : 산재사망 벌금 기업 법인 10억 이하 벌금 (양벌규정 개정)
- 원청 처벌 강화 : 산안법 위반 원청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 수강명령 제도 도입 : 처벌 받으면 산재예방 관련 교육 수강명령

8) 기타

-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 직업병 피해 관련 의사의 노동부 정보 제공 가능
- 역학조사 산재신청인 등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 산재예방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법제화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9) 조문체계 구성 변화 등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 점검 법에 명시
- 하청 노동자 공정 원청의 작업환경측정의무 명확화. 작업환경 측정에 다단계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

요약 및 고려 사항

요약 1/2

- Top-down 방식보다 Bottom-up 방식으로.
 -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전제가 필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경기도, 서울특별시)
- 선택과 집중 전략
 - 모든 분야 대신 특정 직종, 직업군을 먼저
 - 건설, 제조업에 집중
- No Pain No Gain
 - 현장 중심의 실제 예방 사업에 투자와 노력
 - 사업주에게는 penalty와 incentive feedback
 - 현장 노동자에게는 예방 지원과 책임을.
- 뒷처리(보상) 잘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우선 정책

요약 2/2

- 사망사고와 더불어 질병에도 관심을
 - 재해성 사망 사고는 소수, 순간, 급박, 고농도, 응급성
 - 질병은 장기간, 저농도, 다수, 복잡한 노출
 - 예방 대책 수립이나 관리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 계획, 시행, 평가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전제
 - 작업이 안전, 건강에 위협이 될 때는 어떻게?
 - 실제적인 행동 원칙을 마련 – 지자체의 역할과 협조
- 전문 위원회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산재 및 직업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센터 설치
 - 기본적 노동정책과 관리를 위한 도 의회 조례 제정

† 이선영 의원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초안

충남도의 입장

- "현재 산업현장 관리·감독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지자체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대책 방향

-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 제주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률(64.5%)**
 - 강원 다음의 '전국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만인율(1.7)**
-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 기구, 기관 부재
 - 전문 센터 운영 및 제도 강제할 근거 부족
 - 일반 주민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절대적 요소
 - 기존 자료들에서의 공통된 부분
 - 우리나라 산재 예방 대책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 Practice**
 - 교육·홍보 :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상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내 실제적 감시자로 역할
 - 작업중지권 : 작업장 내 안전 위험 발생에 대한 현장 대책

; 중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발동보다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더 중요 ; 예방 차원에서의 적용이 가능해야 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좋은 일자리는 없다’
(No job is good unless it's safe)**

† 출처 : US OSHA of DOL(Dep. Of Labor)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